STRATEGY 21, 통권31호 (2012년 Vol. 16 No. 1)

한·일 간의 현안 : 독도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김 주 식 *

〈목 차〉

I. 서 : 불편한 한·일 관계

II. 한·일 간의 핵심 현안

III.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목표

IV. 결론 : 우리의 대응책

Ⅰ. 서 : 불편한 한·일 관계

2013년 2월 2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島根縣)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정무관(차관보급)을 참석시켰다. 국회의원 21명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대행 및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청년국장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의 고위관리와 의원 및 자민당 주요 보직자가 이 행사에 대거 참여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으며, 이로써 현이 주관하는 행사가 사실상 준 정부 행사로 격상되는 효과를 냈다.[1] 그런가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월 23일에 '영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2)]

한편, 일본 우익세력이 도쿄와 오사카 등의 한인타운에서 "조센징을 때려죽여라," "벼랑에서 밀어버리자," "학살해버리겠어," "조선인 매춘부"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위협적인 시위를 했다. 이러한 반한시위는 주말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자 일본 국회의원 11명이 2013년 3월 14일 일본 우익의 이러한 배외주의 언동과 인종모멸적 행위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반한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 시위에 대한 보도를 외면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보인다.[3)]

국제사회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가 항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조차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5월 8일자 '미일관계 보고서(Japan-US Relations)'는 일본의 우경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이 아시아의 리밸런싱전략을 훼손하고, 주일미해병대와 공군기지의 재배치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4)] 또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과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유신회소속 의원의 위안부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하원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Ed Royce)와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Jen Psaki)는 맹비난을 하였다.[5)]

이러한 현상들은 일제강점기가 종료된 지 68년이 지나고 양국 수교가 이루어진지 4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폭발력이 크고, 크게 주목받고 있는 요소는 독도문제와 역사왜곡문제이다.[6)]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들의 해결 전망은 사실상 거의 없어

---

1) NewsMaker,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2013. 3. 5), http://www.newsmaker.or.kr . 전년도 행사에는 20개사 50명의 기자가 모였으나, 2013년에는 50개사 130여명의 기자가 모였다. 시사포커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생떼쓰는 일본의 속내"(2013. 2. 27), http://www.sisafocus.co.kr

2) 연합뉴스, "일본, 독도·센카쿠 문제 전문가회의 첫 회의"(2013. 4. 24), http://www.yonhapnewa.co.kr

3) 연합뉴스,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 혐한, 친한 단체 신경전"(2013. 3. 31), http://www.yonhapnewa.co.kr

4) 문화일보, "미, 도 넘은 우경화·역사왜곡에 강력 경고"(2013. 5. 9), http://www.munhwa.com

5) TV조선, "미 의회·정부 하시모토 맹비난"(2013. 5. 18), http://news.tv.chosun.com

6)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문제로 간주하지만, 한국이 식민지지배의 역사문제이자 영토주권문제이며 또한 한·일 간 과거청산의 잣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전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남상구, "전후 일본중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영토해양연구」, 창간호, Autimn 2011, p. 177.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독립운동 수준이며, 단일 테마로 가장 왕성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성환,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 – 2010년을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 창간호, Autimn 2011.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의 현황, 본질, 발생 원인,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이 목적을 위해 두 가지 문제를 개관한 후 그 특징과 경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보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Ⅱ. 한·일 간의 핵심 현안

1. 독도문제

1)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

2차 대전 이후 독도문제가 처음 불거진 때는 1952년이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을 선포하고,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1월 28일 일본은 평화선 선포와 독도의 한국 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한국정부는 이를 반박하고 항의하면서 계속 실효적으로 영유해 왔다.[7]

현재 양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외교부와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

7) 이러한 양국의 독도관련 언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독도사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1), 〈부록 2 독도연표〉, pp. 410-413을 참조. "한·일 간 행위를 감안해 보면, 어느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상대국의 항의가 뒤따르고, 이 항의에 대해서 당초행위국은 다시 자국 행위의 정당성 주장과 상대국 항의를 일축하는 식으로 일련의 작용-반작용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진수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동북아역사재단, 2012. 3), p. 30.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8)]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이어서 3가지 항목을 더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 근거' 항목에서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관련 문헌이 기록하고 있음을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한 · 일 간 울릉도 쟁계(爭界)와 우리의 독도 영유권 확인' 항목에서는 17세기의 양국 정부 간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일본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0세기 독도' 항목에서는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게 했으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가 한국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무효이고, 2차 대전 이후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회복하여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 문제'의 항목에서 '다케시마 관련 최서면 원장의 공개서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점거에 의거하여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의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9)]

---

8)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이 기사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라비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어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9) 2012년 8월 27일 재일교포이자 독도문제의 전문가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일본 노다 총리 '독도는 일본땅' 회견에 대한 공개서한"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http://news.donga.com)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2012년 10월 10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http://www.emb-japan.go.jp)

이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기본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주장의 강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자국민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적으로 영유하면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생트집 같은 주장에 냉철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2)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다.[10] 이 항목은 일본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11]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일본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도와 문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나카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초판 1779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찬(私撰) 지도이며, 초판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본토처럼 채색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역 밖에 있는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외무성 : 1870),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해군성 : 1876), 「태정관결정서(太政官決定書)」(1870) 등 많은 관찬(官撰) 문서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밝혀 주고 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근거가 없다는 주장. 일본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우산국인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고, 우산도에 대한 기술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여지지(輿地志)』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여지지』가 우산도와 울릉도를 동일 섬으로 간주하고 있고, 신빙성이 낮은 안용복(安龍福)의 진술을 그대

10) 이것은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작성한 것인데, 일어・영어・한국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아라비아어 10개 국어로 번역해 놓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를 참조.

11) 이하는 한국사일반,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박"(2012. 10. 15), http://blog.naver.com ; 이모저모, "독도 영유권 분쟁 원인 및 일본 주장/ 한국 주장"(2012. 10. 22), http://goodsoldier.co.kr ; ethnos44, "re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2012. 11. 11), http://kin.naver.kim/qna ; 낙서장, "일본 외무성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주장과 근거내용에 대한 반박"(2012. 10. 16). http://ds301.blog.me 를 참고하였다.

로 인용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지도에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도의 우산도가 가공의 섬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1908)에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곧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크기나 위치의 부정확성을 근거로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과학적이고 실제와 동일한 지도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20세기 이후에나 가능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 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는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였고,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이 주장은 1618년 돗토리(鳥取) 번주의 울릉도 도해면허증 발부, 실제로 전복과 강치의 채취와 포획활동 실시, 삼림채벌활동 등의 활동을 한 이래 일본이 계속 독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다. 도해면허는 자국 바다가 아닌 타국 바다로 갈 때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번주가 울릉도를 외국 영토로 간주한 사실을 역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당대 일본 관리의 지방순회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에 "일본 북서의 땅은 이 은주를 한계로 삼는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은주는 오키시마(隱岐島)를 의미한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일본에서 1692-96년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일련의 한일 교섭활동을 지칭하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 발생했을 때,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하면서(1696) 다케시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케시마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어 독도를 명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주에 1도2명설이 소개되어 있음을 들어 부속섬을 부정하고 있는데, 두 개의 섬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본기보다 각주를 더 중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울릉도가 독도의 가시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부속섬임을 부정할 수 없다.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의문점이 있다는 주장. 안용복의 도일 활동은 한국과 일본의 많은 관찬문헌에 나타나는데, 이 사건은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국의 역사문헌을 의심하는 것이다.

6.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주장.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 결정(1905. 12)을 시마네현

지사가 고시(현고시 40호)했다. 일본은 이때 무주지선점론에 의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했다가, 후에 무주지선점론이 아닌 고유 영토임을 근거로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표현을 바꾸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10. 25)에는 울릉군이 울릉 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행동은 러일전쟁 기간(1904. 2. 8-1905. 9. 5)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력에 의한 압박을 받고 있던 때이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일본 관할이라고 결정했다는 주장. 이것은 대일본강화조약(1951. 9. 8)에서 일본의 권리 포기 도서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명기하고,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 1. 29)와 대일본강화조약 1-5차 초안(1947. 3. 20-1949. 11. 2)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었으며, 6차 초안(1949. 12. 29)에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인 시볼트(William J. Sebald)를 이용한 일본의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1925년 7월에 도쿄로 파견되었다. 그는 영국계 일본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1933년 전역했으며, 결혼 후에는 장인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해군에 입대한 그는 해군정보국에서 일했으며, 1946년 1월에 파일되어 유창한 일어실력과 일본인들과의 폭넓은 교제를 바탕으로 맥아더의 정치고문이 되었다. 그는 맥아더가 우호적인 일본관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본 유지들을 맥아더에게 연결시켜 주었다.[12] 미국은 친일파였던 시볼트의 노력으로 4년간 유지해 오던 입장을 바꾸었으며, 그 결과가 6차 초안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호주 등 다른 연합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초안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7차 초안부터는 독도를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6·25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한편, 일본은 독도가 조약에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조약에 명시된 3개 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섬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을 일본인 외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12) 일본아시아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asjapan.org/web.php/lectures/2006/11을 참조.

8. 독도가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다는 주장.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2160호와 일미합동위원회가 1952년 7월 26일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25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항의했으며, 그 결과 미군은 1953년 3월 19일 이를 해제하였다.

9.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엄중하게 항의 중이라는 주장. 한국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독도를 관할해 왔다. 일본인들은 19세기 후반에야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는 한국 영토라고 포고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관리했으며(일본 1905년, 한국 1900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한 후인 1948년에 행정구역 주소를 부여했고, 현재 한국인 상주인력이 있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10.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주장. 한국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일본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에서 몇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영유권 확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인식은 인식일 뿐, 인식 자체가 법적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인식하고 있으면 일본과 미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둘째, 고지도에 대한 몰이해이다. 고지도가 현대 지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고지도가 실제 모양이나 크기와 다르게 그려져 있거나 현재 지명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면, 그 지도를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은 고대와 중세의 지도 제작자에게 현대의 첨단과학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도와 똑같이 지도를 그리라는 것과 같다.

셋째, 불법어로와 삼림채취를 영유권 확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불법활동은 처벌 대상일 뿐이다. 우리 어선이 오끼시마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그 섬에 상륙하여 도벌을 하면 그 섬을 우리나라 섬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넷째, 다른 나라의 많은 역사문헌과 고지도는 모조리 무시하고, 자국 자료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자국 자료 중에서도 자료의 전체적인 문맥과 뜻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한 채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편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명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자국 영토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그 섬이 무국적 도서가 아니며, 수많은 섬 중에서 대표적인 섬들만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부속도서일 경우에는 명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섯째, 미국인이 관여한 자료와 미국인의 심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바꾼 것은 친일파 미국인 시볼트를 이용한 일본의 로비와 6·25전쟁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른 연합국들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제동을 걸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기존의 초안을 고수했다. 미국은 독도를 조약에 명기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시볼트의 말만 믿고 행동하다가 다른 연합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체면을 구기고 난처해진 미국의 책임회피 방법이었다.

일곱째, 일본은 군국주의 팽창정책을 추구하던 시대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는 시기 이후부터 20세기 중엽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청일전쟁(1894-95), 러일전쟁(1904-95), 한일합방(1910), 일제강점기(1910-45), 6·25전쟁(1950-53)을 겪은 한국으로서는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에게 무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수모를 당하던 시기였다. 일본은 해양관련 국제기구에 자신들만 대표로 참가하여 동해의 국제적인 명칭을 일본해로 바꾸는 등 한반도 주변의 바다를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하던 때였다.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일본이었으며, 또한 남북분단의 원인제공도 일본이었다. 일본은 바로 이 시기에 취한 조치와 행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이 실제 영유하고 있는 독도를 어떻게든지 국제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처음 주장한 때는 1954년 9월이었다. 이 시기는 6·25전쟁 직후로서 한국 정부가 전후 처리와 복구 등으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다. 1962년 3월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시기는 한국이 4·19와 5·16 등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식민지와 남북분단의 후유증을 앓던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은 인근 국가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때를 틈타 기습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자신감이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과 영향력의 차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보유[13], 한반도보다 일본을 더

13)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15명이다. 일본은 1961년부터 3명의 재판관을 배출하였다. 현 재판관은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恆)이다. 그는 2003년에 재판관이 된 후, 2009-12년 동안 재판소장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에 재선되었다. 일본 왕세자비의 부친이기도 하다.

중시하는 미국의 극동정책 등이 일본이 자신감을 갖는 요소들이다. 일본은 미국의 여론쯤이야 시볼트를 이용하여 조약 내용을 바꾼 것처럼 얼마든지 자국에게 호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

1) 왜곡의 경과

2차 대전 후 미군정은 평화헌법을 만들어 일본에게 주었다. 이 헌법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으로 하여금 군국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려는 유엔이 고심한 끝에 내놓은 산물이었다. 일본의 교육도 이 헌법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 헌법의 영향인지 몰라도, 전후 일본에서는 과거사의 반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과서가 많이 나왔다. 한편,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그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며, 그만큼 그 시대를 자랑스러운 시대로 미화하려는 보수적 우익 성향의 교과서도 나타났다.

전후 일본 정치계에서는 일본을 중국과 소련에 의한 공산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국가로 생각한 미국의 지원 하에 보수우익의 자민당이 집권당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계의 판도는 부동의 것이 되었다. 집권층이 된 보수우익 세력은 자연히 교과서에 대해서도 통제하려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검정제도였다. 그러나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가 1965년과 1967년에 두 차례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본 법원으로부터 검정제도가 위헌과 위법이며 또한 국가의 교육권이 아닌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 자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진보세력과 보수우익세력의 충돌은 일차 일단락되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일지〉[14]

일 시	내 용
1947.	평화헌법 의거 교육기본법을 제정
1956. 2	교과서조사관제도의 도입(문부성)
1949. 4	검정교과서 사용 개시
1965. 6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가 문부성의 검정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
1970. 7	도쿄지방재판소가 검정을 위헌으로 판결
1982. 6	문부성이 고교 역사교과서에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중국 침략을 중국 진출로, 출병을 파견으로 표기하라고 지시
7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만든 고교 교과서 '신편일본사'를 검정. 한·중의 항의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지시(38개 항목)를 거쳐 최종 합격
11	문부성이 '근린제국 조항'을 검정기준에 포함시켜 주변국을 무마
1989. 4	검정제도를 전면 개정
1993. 8	자민당에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는 담화 발표
1995. 1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동경대교수의 주동으로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발족
1996. 6	위안부를 기술한 교과서 등장
7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이 등장
1997. 7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결성, 이 모임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
2000. 9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의 검정신청본 내용 공개 – 침략 미화, 황국사관
12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 200여 곳 수정
2001. 3	우익교과서 8종에 대한 검정 통과 결정
4	일본 정부가 우익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공식 발표
2002. 5	다케시마 영유권을 기술한 교과서의 검정 통과
2004. 4	'새역모'의 개정판 교과서 신청본의 검정 접수,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점거를 최초로 기술
11	문부과학성이 후쇼사에 검정의견을 제시 –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수정
12	도쿄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내용을 추기
2005. 3	문부과학성 대신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이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
4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
2006. 3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일본 영토를 명기 주장
10	'새역모' 이탈세력이 '일본교육재생기구'를 설립
12	아베 신조(安倍晉二) 내각이 교육기본법을 개정 – 애국심, 공공정신, 전통문화를 강조
2007. 7	'일본교육재생기구'가 교과서 개선의 모임을 결성하고, 이쿠휴샤(育鵬社)를 출판사로 선정
2008. 3	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14) 이 표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http://www.nahf.or.kr/?sidx=73&stype=1)의 '동북아역사이슈-근현대사-일본역사교과서.' ; 2013. 3. 26 연합뉴스, "일본 교과서 검정 파문 일지" (http://www.yonhapnews.co.kr) ; "일본 교과서 왜곡 일지(2005. 3. 31)" (http://cafe.daum.net/minjokkgnb)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7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 한·일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12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일본 영토 문제를 명기
2009. 3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2009. 4	'새역모' 잔류세력이 지유샤(自由社)를 출판사로 선정
12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개정 –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루고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
2010. 3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2011. 3	검정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 17종 중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도서검정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한 것을 공개하고 확립
2012. 1	교육재생실행본부 설치
3	검정 통과된 고교 사회교과서 39종 중 21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역사교과서 19종 중 12종이 위안부 기술
2013. 3	고교 사회과교과서의 검정 결과 발표 – 21종 중 15종이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표기, 식민지배와 위안부 등은 누락
4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가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특별부회'를 개최

그로부터 2년 후 중국과 일본의 국교가 회복됨을 계기로 일본이 과거 중국에서 저지른 행위들이 교과서에 기술되자, 우익세력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활동은 자연히 정계와 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1982년 6월 문부성은 교과서에서 31운동을 시위와 폭동으로, 출병과 침략을 파견과 진출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리하여 교과서 파동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모아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국내외의 비난과 항의로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사과하고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0년대에는 정계 즉 자민당 내에서 교과서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과거사 인식 제고를 기치로 내건 몇 개의 우익단체들도 발족되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은 일본에서 제3차 교과서 공격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활동은 2000년대에 이르러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2000년 4월 후쇼사(扶桑社) 교과서를 검정해달라고 신청한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정에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아주 낮았다.

교과서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晉三)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총리대신이 된 2006년 후반기에 더욱 우경화되었다. 애국심, 공공정신, 전통문화 존중을 주요 목표로 삼은 교육기본법이 최초로 개정되었으며, 일본교육재생기구가 발족되었다. 보수

우익세력은 정부와 집권당 및 경제계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보수우익세력의 교과서에 대한 채택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채택률이 2001년에 0.039%로 미미했으나, 2011년에는 4%대로 올랐으며, 2012년에는 약 5만 명의 중학생이 이 교과서를 이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2013년도에는 채택률이 보수우익세력도 놀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15]

2) 교과서의 역사왜곡 내용

교과서에서 역사왜곡이 나타나는 주요 부분은 대체로 아래 표와 같다. 고대사가 8가지, 중세사가 3가지, 근세사가 16가지, 현대사가 3가지이다.

〈일본 교과서의 주요 역사왜곡 내용〉[16]

항 목	왜 곡 내 용
일본문화의 기원	BC 3-4세기의 야마토 문화가 아닌 BC 1만년-4, 3세기의 조몬문화가 기원 ⇒ BC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황하문명보다 오래 되었다고 주장, 통설은 야요이문화가 기원
신화의 역사화	천지창조, 남녀 신의 결합에 의한 일본 형성(國生神話), 황조신(皇朝神)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탄생과 그 후손의 지상 출현(天孫降臨神話), 지상강림 후손의 즉위(神武天皇) ⇒ 길게 서술하여 고대 신화를 현대에 재생하여 사실화 시도
국호	BC 3세기 야요이 시대부터 일본(日本)이란 국명을 사용 ⇒ 왜(倭)로 불리다가 AD 7세기 이후에야 일본이란 국호 사용
도래문화	조몬시대에 대륙에서 벼농사문화와 농경문화가 전래, 4-7세기 한반도 이주민을 귀화인으로 표기 ⇒ 야요이 문화 때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농경문화 전래, 도래인이 문자를 알아 기술, 사상, 제도, 문화를 발전시킴
지명 비정	한(漢)의 영역을 한반도 서부 전체로 표기, 대방군은 서울 부근으로 비정, 임나를 전라도 전체와 충북과 경북의 일부로 비정 ⇒ 진번군 : 한강 북부, 대방군 : 황해도 봉산군, 남부지방 : 삼한(三韓), 임나 : 가야지역연맹체

15) 61%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도쿄쇼세키(東京書籍) 공민교과서에도 '불법점거'하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남상구, "전후 일본중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Autumn 2011, p. 187.

16) 이 표는 한일관계사학회 지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2권(자작나무, 1998) ; 한국사연구회 & 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2008)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있다.

임나일본부	야마토 정권이 369-562년 기간에 가야제국을 지배 ⇒ 학계 정설이 아니고, 편협적인 자료만 이용. 지배가 아닌 문화교류
야마토 정권과 한반도 관계	야마토 정권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화가 일본에 전래, 백제가 불상과 경전을 헌상 ⇒ 한반도의 가교론, 통과 지점화. 중국에서 직수입 사실 암시. 문화 전파를 정치활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제국주의적 발상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론	신공황후(神功皇后)가 정벌에 나서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항복하고, 서번(西蕃)으로 자칭하고 조공을 맹세 ⇒ 일본서기(日本書紀)만이 근거 자료, 학계는 신빙성 없는 사료로 이미 평가
왜구	왜구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16세기 중엽에는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 극소수 존재했을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 대부분은 일본인. 약탈보다 무역행위를 강조. 발생 원인을 무시
임진왜란	히데요시는 거대한 꿈을 갖기에 이르렀다. 2번에 걸친 출병의 결과 ⇒ 전쟁의 원인은 히데요시 개인이 아닌 무사집단의 공명심. 침략을 출병으로 호도. 인적, 물적 피해와 조선의 문물(도자기/인쇄술/유학 등) 전래 사실의 누락으로 조선 무시 의도의 표출.
통신사	장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국(이씨조선)의 통신사 사절이 방문 ⇒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암시하여 일본 우위 과시. 이씨조선이라 하여 조선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일본을 독립국으로 암시. 인적 교류만 강조하고 문물 전래는 누락
강화도사건	군함을 파견하고 무단으로 주변 연안을 측량하는 등 압력을 가했기에 군함이 포격을 당하고 교전한 사건 ⇒ 우연히 발생했다고 강조. 한국의 평화적 국교재개 노력을 거부하고 일본 국내정치 혼란의 타개책으로 계획한 침략행위. 미국에 의한 자국 피해는 강조하고 자국에 의한 타국 피해는 은폐
조일수호조규	무력을 동원한 체결사실을 은폐. 한국 침략 의도의 은폐. 청국으로부터 조선 독립을 강조
임오군란	조선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군제개혁 지원에서 소외당한 일부 조선군의 폭동 ⇒ 한국에 대한 일본 영향력의 확대 목적을 은폐
갑신정변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 조선을 잃지 않으려고 일본을 가상적국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하여 근대화 추진세력이 쿠데타 일으키자 청군이 친일파 탄압 ⇒ 일본이 청국을 적국화한 사실 은폐. 갑신정변세력을 개화파 아닌 친일파로 지칭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동학난으로 불리는 농민폭동. 조선이 청에게 진압군 출병 요청. 일본군이 청과 합의에 따라 군대 파견. 청일 양군의 충돌로 전쟁 시작 ⇒ 동학농민군 봉기를 난과 폭동으로 폄하. 일본의 출병을 정당화. 전쟁 원인 무시. 일본의 한국지배 시도를 은폐. 탄핵위기에 몰린 이토오 내각이 난국타개책으로 전쟁 야기
러일전쟁	러시아 때문에 전쟁 발발. 영국과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개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 지배권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유색인종국인 일본이 세계 최대 백인제국인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식민지 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줌. 일본의 안전보장 확립이 가능 ⇒ 양국에 의한 한국/만주 침략정책. 전쟁의 본질을 외면 (러/일 제국주의열강의 한국쟁탈전, 영/러 대립에 의한 열강 개입 제국주의전쟁, 한국식민화를 시도한 일본제국주의와 한국인의 대항). 한국 지배권 확보를 누락. 영국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인종전쟁으로 미화

협조외교	시데하 기주로 외무상(1924-27, 29-30)이 영/미와 협력하여 워싱턴 체제를 수호, 중국 민족주의에 동정하는 협조외교 구사, 남경 외국인 습격사건과 중국의 불평등 조약 무효화선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연약외교 실시. 군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관동군 행동에 대한 지지자 증가 ⇒ 민간 정당정치를 폄하, 군부통치 미화
만주사변	재만 일본인 보호/중국의 배일운동/소련의 위협에 대한 행동. 사변 이후 만주 경제 성장 ⇒ 일본 경제의 돌파구, 무한원료공급지의 확보, 대륙침략의 발판 확보 등의 이유를 누락. 일본인과 일본 자본의 만주 유입 및 만주인의 항일운동 은폐
중일전쟁	노구교에서 일본군에게 발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군과 전투상태 돌입. 일본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 국민당 정부는 동원령을 발표. ⇒ 발발을 양국의 양비론화
남경 학살	이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자료상 의문점도 제기되고, 다양한 의견도 있어 지금도 논쟁 중이다. ⇒ 사실에 대한 부정과 축소 의도
태평양전쟁	전후 미국이 대동아전쟁 대신 태평양전쟁의 명칭만 사용하게 함. 미국은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일본의 독자적인 경제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미일 통상항해조약의 연장을 불허. 미, 영, 중, 네덜란드 4국이 일본 경제를 압박, 미국이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일본의 철퇴를 요구하자 일본이 개전. 이 전쟁은 자존자위를 위한 대동아전쟁 ⇒ 미국의 배일정책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서 비롯되었음을 무시,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미/영에 대한 선전포고를 은폐
대동아회의	일본의 승리는 동남아인과 인도인에게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불어넣음. 1943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대동아회의에 여러 국가의 대표가 참가하여 아시아인에 의한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결성 ⇒ 각국 꼭두각시 친일파 대표와 정치인들의 모임
태평양전쟁의 영향	일본의 남방진출은 원래 자원 획득이 목적이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위안부 은폐, 아시아 민족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미화
조선식민지	일본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위해 한국 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 구미 열강이 일본의 한국 병합을 인정. 두 전쟁의 승리와 침략으로 일본은 근대국가 완성. 조선총독부가 철도, 관개시설 등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 ⇒ 한국 무력합병을 정당화. 강대국들의 추인을 강조, 선의의 개발로 착각 유도, 토지조사에 의한 한국 농민의 유랑 사실 은폐
대만 지배	청일전쟁 시 일본 영토가 된 대만에서도 현지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 식민지가 아닌 영토로 표현. 지배가 아닌 개발을 강조
창씨개명	창씨개명으로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는 정책을 추진 ⇒ 강제 집행 사실 은폐, 일본인화가 아니라 황민화 정책
동경재판	자위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하여 죄라 했으며, 이런 죄로 국가지도자를 처벌한 것은 국제법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 ⇒ 나치도 무죄라는 논리와 동일. 침략전쟁은 국제법 위반행위
평화헌법	미국 점령군이 일주일간 졸속으로 마련한 것을 강요, 일본은 천황의 지위변동을 우려하여 수용. 교전권 부인 등 국가의 주체성을 부정. 일본의 국제공헌방법을 제한 ⇒ 평화헌법을 비판. 외국에 군대 파견을 가능하게 개정할 필요성 역설
독도문제	일본 교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중 ⇒ 한국의 영토임을 부정, 독도를 국제분쟁지화하려는 의도를 내포

고대사에서 역사왜곡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근거 확보이다. 이것은 일본 문화의 기원을 소급시켜 황하문명과 대등한 문화의 존재를 과시하고 신화를 역사화하려는 시도로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주변국보다 더 오래되고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대륙문화가 일본열도로 전래될 때 한반도가 단순히 가교 역할만 했으며, 일본만이 중국의 책봉조공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유지했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방을 점령했으며, 나아가 일본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모두 정벌하여 조공국으로 만들었다는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세사의 역사왜곡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왜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이다.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이었으며, 왜구의 주요 활동이 약탈이 아닌 교역활동이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둘째는 임진왜란에 대해 국가가 주도한 침략적 성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발발 이유를 국내문제의 해결이 아닌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으로 간주하고, 일본 침략군의 야만적인 잔혹성(코무덤)과 조선으로부터의 첨단문화와 기술의 전래라는 역사적 사실을 대폭 축소하여 기술하거나 아예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셋째는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을 과시하는 것이다. 교과서에는 중국의 종속국인 조선이 일본에게도 조공국이었다는 증거로 통신사가 예시되어 있다.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이 통신사를 보냈다 하여 우호친선사절을 조공사절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통신사 일행이 일본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만 소개할 뿐, 대규모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문물을 전파한 사실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조선이 '일본의 조선침략의지를 탐색하고' 또한 막부 쇼군이 국내 다이묘들에게 최고통치자로서 정치적 우위를 과시하고 또한 일본의 대표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조선에 요청한 사실도 물론 누락되어 있다.[17]

근대사의 역사왜곡은 4가지이다. 첫째는 일본에서 발생한 군부의 정변(政變)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와 민간인정치의 외교활동을 연약외교로 매도하고 있으며, 군부 쿠데타 행동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조선 말에서 한일합병까지의 과정을 불가피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치밀한 조선침탈계획 하에 저지른 일련의 행동을 우발적 행동이나 자국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일본이 근대사에서 일으킨 일련의 전쟁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반세기 동안(1894-1945)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17) 이훈, "근세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제30집, 2008. 8, p. 162와 p. 172.

태평양전쟁 5차례의 전쟁을 일으켰다. 조선과 동남아의 식민지화에 따른 독립운동까지 합하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 전쟁들을 방어전쟁, 인종전쟁,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넷째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한 사실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교과서에는 일본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본의 꼭두각시였음에도 각국 대표인 것으로 묘사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점령과 지배기간 동안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국토가 개발되었다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기간 동안 일본군이 자행한 만행과 착취 등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현대사의 왜곡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취한 조치들의 부당성과 그에 따른 일본의 억울함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연합국이 일본을 전범국과 패전국으로 낙인찍어 전범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일본 지도층을 전범자로 처벌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제시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일본국민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만들어 일본에게 강요한 평화헌법이 일본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둘째는 영토 팽창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독도문제는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으려 한다.

Ⅲ.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목표

독도문제와 교과서의 역사왜곡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서양 중심주의와 일본 우월주의의 표출이다. 일본은 근대에 이르러 서양제국들에게 당한 압박과 피해 및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서양문명이라면 무엇이든 도입하고,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모방적 서구화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양문명의 도입이 늦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깔보고 일본이 그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18]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일

18) "2011년판 지유샤 역사교과서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 우월적 역사관으로 더욱 무장되어 있음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김보한, "2011년도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변화와 특징 – 전근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제40집, 2011. 12, p. 88.

본의 이러한 세계인식이 보수우익세력의 교과서에 담겨져 있다. 독자성과 종속성,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진보와 정체,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적 역사인식이 그들의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침략으로 일관된 근대사 즉 과거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는 대신, 군국주의와 국가주의를 은근히 찬양하고 있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연이은 전쟁 발발과 광대한 영토 팽창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보수우익세력은 전쟁을 일본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자 국력 향상의 지름길로 간주하고 있다. 억압받는 유색인종을 해방시키고, 황인종의 공동 번영을 위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버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자연히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한 천황제 수호자와 군국주의자 같은 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찬양과 미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과 중국 및 북한 등의 공산당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셋째, 위 두 가지와 연계되는 것으로 영토 팽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점을 무기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밑에 깔려 있다. 독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일련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자국민의 인식부터 바꾸어 놓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그 결과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점거와 일본 교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다.[19]

독도문제와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보수적인 우익세력이다.[20] 이것은 일본에서 나타나는 망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19) "이것은 이들이 영토문제를 기술하는 목적이 영토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도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 하다. 남상구, 같은 논문, p. 193.

20) "역사학에 있어서 진보는 대외개방, 평화지향, 국가침략성 비판, 전쟁책임 인정과 같은 변화를 의미하고, 보수는 자민족 중심, 대립지향, 국가체제 옹호, 전쟁책임 회피 등의 변화를 보이는 세력이다." 최영호,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 : 한일관계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제40집, 2011. 12, P. 119.

〈독도와 역사왜곡 관련 일본 주요 인사들의 발언 현황〉[21]

이승만 대통령 : 48. 7 – 60. 4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51. 9	요시다 시게루	총리대신	재일한국인에게 일본 국적 불허, 이민족인 소수민족은 뱃속의 벌레
53. 10/15	구보타 간이치로	한일회담대표	한국 독립과 재한일본재산의 처리는 국제법 위반,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한 것은 시혜
58. 6/11	사와라 겐죠	한일회담대표	38선을 압록강으로 정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임무
58. 7/28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	한국, 대만과 함께 일본합중국 건설 희망

윤보선 대통령 : 60. 8 – 62. 3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61. 7/21	아라키 마소오	문부대신	조선인을 아프리카 토인에 비유

박정희 대통령 : 63. 12–79. 10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62. 10/5	티케다 하야토	총리대신	이토오 히로부미처럼 한국에 침투해야 한다.
63. 1/9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	독도 한일공유론 주장
64. 4/12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관방장관	일본은 장형(長兄), 한국은 말제(末弟)
64. 12/18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	일본과 한국은 부모자식 관계
65. 1/7	다카스키 신이치	한일회담대표	조선 지배는 조선을 위한 것, 통치기간을 20년간 확대 희망, 창씨개명은 일본인과 동격화 조치
65. 2/15	시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	조선합병은 영광스러운 일본제국주의
74. 1/24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대신	장기간 합방으로 훌륭한 김 양식법, 교육제도 전수. 정신과 생활에 근착시키는 것이 중요
74. 3/2	누에무라 고고로	경단련 회장	한국이 자원 부족하나 내지(內地)도 부족
77.	후쿠다 다케스	총리대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
79. 3/21	사쿠라다 다케시	경단련 회장	한국 발전은 일본식민지시대의 교육 덕분

21) 이 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독도 사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1), "부록 2 : 독도 연표," pp. 401–413. ; http://blog.daum.net/367park/22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 일지" (2012. 09. 03 게재, 2013. 03. 21 검색) ;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2004년–2010년)" (2012. 8. 16 게재, 2013. 01. 25 검색) ;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1994년–2003년)" (2012. 08. 16 게재, 2013. 01. 25 검색) ;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1951년–1989년)"(2012. 08. 16 게재, 2013. 01. 25 검색)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 80. 9 - 88.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82. 7/23	마쓰노 유키야쓰	국토청대신	교과서 기술의 왜곡 지적, 한국을 침략한 것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
82.	마쓰노 유키아쓰	국토청대신	한국의 교과서 항의는 내정간섭
82. 8/6	마쓰노 유키아쓰	국토청대신	국가별 민족사관 기술은 정당, 한국의 과거 반성이 필요
84.	아베 신타로	외무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
84. 8/10	다나카 로쿠스케	자민당 간사장	한국이 싫고, 지저분함. 한국대통령에 대한 일본식 호칭은 정당
86. 7/25	후지오 마사유키	문부과학대신	교과서를 문제시하는 자는 자기부터 반성 필요
86. 8/22	후지오 마사유키	문부과학대신	신념 불변
86. 9	후지오 마사유키	문부과학대신	청국 속령이었던 조선이 러시아 속령이 되는 것을 방지, 한일합방은 담판과 합의에 의한 것

노태우 대통령 : 88. 2 - 93.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88. 4/22	오쿠노 세이스케	국토청대신	백색인종의 아시아 식민지 안전을 위해 전쟁,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님, 노구교 사건은 우발적, 한국의 불평은 이해 불가
89. 2/18	다케시다 노보루	총리대신	침략전쟁 여부는 훗날 역사가 평가

김영삼 대통령 : 93.2 - 98.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94. 5/3	나가노 시게토	법무대신	다른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위한 전쟁은 정당, 난징사건은 날조, 위안부는 한국인 차별이 아닌 공창, 다른 나라도 공창 존재
94. 8/12	사쿠라이 신	환경대신	침략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교육을 위한 전쟁
94. 10/24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대신	2차대전의 침략전쟁설 부정
95. 3/16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대신	2차대전은 백인 식민지 해방 위한 자위전쟁, 안중근은 살인자
95. 6/3	와타나베 미치오	전 부총리대신	한국 통치의 식민지지배를 부정, 무력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을 부정
95. 8/8	시마무라 와시노부	문부과학대신	침략전쟁을 부정
95. 10/1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대신	합법적인 한일합방조약은 유효
95. 10/11	에토 다카미	총무대신	한일합방은 국제법적으로 유효, 식민지시대에 한국에 좋은 일 많이 함.

95. 10/17	고노 요헤이	외무대신	남북분단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 책임 부정
95. 12/8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대신	미군의 점령정책과 극동군사재판이 침략과 잔혹행위를 과장
96. 5/28	이타가키 다다시	자민당 의원	위반부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부당하고 진실의 왜곡
96. 6/4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대신	위안부는 상행위이고, 비강제성
96. 6/29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대신	위안소는 정부가 아닌 업자가 경영
96.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대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접안공사는 일본 주권 침해
96. 8/8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	남북통일이 되면 한국은 피폐해지고, 난민의 도일이 우려되며, 식민지 배상을 재차 제기할 우려가 있다.
96. 10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
97. 1/24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	위안부는 공창제도

김대중 대통령 : 98. 2 – 03.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98. 7/31	나카가와 쇼이치	농수산대신	강제성이 의문시되는 위안부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 반대
00. 4/19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재해 발생시 제3국인의 소요 발생 예상
00. 5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	교육칙어 칭송, 천황 중심의 신의 나라
00. 8/19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01. 2/18	노로타 호세이	전 방위청장관	대동아전쟁이 식민주의를 종결, 여러 국가를 독립시킴. 미국의 강압 때문에 자원 확보 위해 전쟁 발발
01. 2/27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노무현 대통령 : 03. 2 – 08.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05. 2/23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05. 3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
06. 2/23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독도는 일본 영토

이명박 대통령 : 08.2 – 13. 2

일 시	성 명	직 책	내 용
10. 4/7	하토야마	총리대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불변
13. 1/24	아베 신조	총리대신	물의를 두려워 마라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망언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장관급 이상은 총리대신(10회), 부총리대신(1회), 문부과학성대신(16회), 외무대신(8회), 법무대신(5회), 관방장관(4회), 국토청장관(4회), 환경・통산・농수산대신(각 1회), 방위청장관(1회)이다. 그밖에도 도쿄도지사와 시마네현지사 같은 지방고위관리, 자민당의 주요 보직자, 주한일본대사, 경단련회장 등이 있다. 이 표는 거의 모든 대신과 장관이 망언을 했으며, 그 중에서 총리대신・문부과학성대신・외무대신・법무대신・관방장관이 망언을 주도하고 있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망언 주도자의 상황은 보수적인 우익세력의 핵심이 고위관료, 집권당인 자민당, 경제계 거물들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중요한 것은 이 세력 중 많은 사람이 군국주의 팽창시대 지도층의 후손이며, 일본의 간판급 회사들이 그 시대에 군수품 제조회사로 시작하여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총리대신의 조부는 참의원을 지낸 아베 간(安倍寬)이고, 외조부는 전 총리대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이다. 기시는 만주국 총무처 차장과 도조 내각의 상공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전후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았다.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한 자민당 청년국장 고이즈미 신지로는 부친이 전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이고, 조부는 전 방위청장관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이다. 준야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일본군의 개입을 당연시한 마쓰야작전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 미쓰비시(三菱), 마쯔시다(松下), 미쯔이(三井) 등의 재벌들은 조선업, 광공업, 항공산업, 포와 어뢰 제조 등 군수산업을 통하거나 식민지 경영과 식민지 경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는 자신들의 대리국으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전범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황제와 군국주의를 추종하고 침략전쟁에서 연승을 하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일본 우익세력은 전후에도 여전히 일본 지도층의 자리를 유지하고, 대물림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우익세력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과거사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자학사관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과거 침략전쟁들에 대한 일본인의 죄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여 재무장하고, 외국에 파병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22] 달리 말하면, 보수우익

22) 2013년 5월 5일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후, 도쿄돔 프로야구 경기에서 헌법96조를 상징하는 96번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시구하였다. MK뉴스, "아베 총리, 헌법 개정 본격 시동"(2013. 5. 6), http://news.mk.co.kr .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여 내정문제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아베의 행동을 사실상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일보, "美, 아베 평화헌법 개정 시도 못본 척 하나"(2013. 5. 4), http://news.donga.com

세력은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와 중국대륙 및 동남아까지 점령하고 지배하던 시대처럼 아시아와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대국이 되고 싶은 바램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 우월주의는 한국 멸시론을 낳았고, 한국 멸시론은 정한론(征韓論)을 낳았으며, 정한론은 일제강점기를 야기하였다. 주변국이 일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항의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주변국들은 일본의 침략과 점령으로 고통을 당한 아픈 근대사의 경험이 유사하게라도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Ⅳ. 결론 : 우리의 대응책

혹자는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일본의 국내문제로 생각하여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은 과거사를 성찰하지 않고 있고, 주변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을 세계에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설령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언어유희의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은 전후 독일처럼 진정성 있는 언행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군국주주의 시대가 독일의 나치시대와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우익세력이 제작한 교과서는 그 채택률이 지난 10년간 0.039%에서 4%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다. 2012년에 일본 대학생 440명을 조사해 보니,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67%였고,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은 2%에 불과하였다.[23]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혹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처럼 우익세력 교과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주변국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기에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은 일본이 자국 안보와 방어논리로 변명하려 한지만, 일본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하고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혹자는 양심적인 일본인을 지원하고,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 나아가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한 국제연대를 결성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4] 실제로 2001

23) 한국경제TV뉴스, http://www.wowtv.co.kr.

년 후소샤 교과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가 위력을 발휘하여 채택률을 아주 낮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발족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내놓을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근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보인다. 미국에서 위안부기림비와 위안부소녀상이 속속 건립되었고, 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2007년), 지방의회에서 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관련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했으며, 재미 일본인사회는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결의안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25] 일본 국내에서도 우익성향 교과서들의 채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의 연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두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26]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그보다 더 뛰어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와 자료 및 논리를 글자 한자 토씨 하나까지 정치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자료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역사가, 국제법학자, 논리학자, 국어학자 등이 참여하는 학제간 공동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알아 내야 한다.[27] 일본이 끈질기게

---

24) 허동현, "역사 교과서(후소샤 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 한국사연구회 & 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2008), pp. 26-28.

25) NWEAis, "일본, 미국서 '위안부=매춘부' 조직적 왜곡 심각" (2013. 01. 24), http://www.newsis.com.

26)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대응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남상구는 자료와 학문적 성과를 이용하여 집필자를 설득하는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한국 학생들의 지식과 논리를 일본 학생보다 강화하며, 일본의 전략이 홍보와 분쟁지역화이기에 일희일비하는 태도를 버리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동북아역사재단 인터넷자료 2012, pp. 148-150. ; 홍성룡은 실효적 지배의 강화, 외교정책의 강화, 학술 연구와 역사교육의 강화, 신 한일어업협정 개정, 군사안보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홍성룡,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pp. 81-93. ; 배진수는 정교한 영유 논리로 일본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 대상국가별 맞춤형 독도영유권 홍보전략, 독도기사 보도와 언론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배진수, 같은 책, p. 123. ; 이성환은 한국자료의 발굴과 활용으로 독자적인 관점과 논리의 창조적 재구성,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노력 필요, 국제법과 역사적 연구의 공동작업 필요, 독도이용개발에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성환, 같은 논문.

27) "일본에서는 외무성 기록인 『竹島考証』(상・중・하), 田村清三郎의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川上健三의 『竹島の歷史地理學的研究』가 복각되었다. 이들 연구는 초판 발행 이후 이미 30년이 경과한 저작들인데, 이 시기에 잇달아 복각된 것은 竹島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장근, "일본의 竹島・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 - 1905년 '竹島영토' 편입 ~2055년 '竹島의 날' 제정-," 「東北亞歷史論叢」, 제18호, 2007. 12, pp. 34-35.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비장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근대의 자료가 아니라 현대의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법원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일본 행정부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볼 때, 의혹은 더 커진다. 따라서 양국 정부와 관료들이 체결한 조약, 협의, 회의, 각서, 비밀메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도문제와 역사왜곡문제는 일차적으로 자료와 논리싸움이다. 자료의 수집과 발굴 및 분석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으며, 논리는 자료를 기반으로 세울 수 있다. 이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나 관련자들은 필요할 때만 당장 이용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찾는다. 역사연구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역사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역사가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전공분야만 중시하는 편협된 태도와 동양사·서양사·한국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려는 학계의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독도와 역사왜곡의 문제는 자국사 위주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사, 교류사, 비교사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연구성과와 입장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맹점 중 하나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내에서만 갑론을박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국내에서만 세계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이다. 그 한 예로, 충무공 이순신과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만큼 자칭타칭 전문가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용일뿐 국제사회에 연구결과를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관련된 국내 학계와 기관들은 적어도 한글본과 영문본 학회지를 동시에 발행해야 하고, 기존 서적들의 영문번역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독도와 역사왜곡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국제관계가 국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자명한 이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영토와 재외동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략하거나 혐한증이 너무 깊어져 재외동포가 위험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했을 때, 이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면 그대로 당하거나 사후처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해상으로 오는 적을 지상에서 맞이하여 격퇴하려 했다가 국가 멸망의 위기까지 갔으며, 결국 적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군이었다. 6·25전쟁 때에는 지상전만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상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지상전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항공전과 항공지원도 공군기가 아니라 해군 함재기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망각하는 것은 국가를 다시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일이다.[28] 그러나 우리의 해양경찰력과 해군력은 주변국에 비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감안할 때 너무나 열악하다.

독도문제와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당사국인 일본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항의와 비난 그리고 공동의 노력 촉구 외에는 별로 없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대체로 우리가 국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 두 문제가 일본의 국내문제이지만 국제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국제문제이지만 주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보한, “2011년도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 동아시아사 서술의 변화와 특징 – 전근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 제40집, 2011. 12.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동북아역사재단 인터넷자료 2012.

남상구, “전후 일본중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영토해양연구」, 창간호, Autumn 2011.

배진수『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년)』(동북아역사재단, 2012. 3), p. 30.

이성환,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 – 2010년을 중심으로,”「영토해양연구」, 창간호, Autumn 2011.

28) 1977-1996년의 20년 동안 일본 순시선, 항공기, 어선이 독도 근해에 출현한 것은 465회였으며, 그 중에서 영해를 침범한 것은 23회였다. 배진수, 앞의 책, p. 32. 특히 2012-13년에 이르러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군사력 시위와 전쟁불사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 일본 집권층의 언행으로 볼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훈, “근세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 제30집, 2008. 8.
최영호,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 : 한일관계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 제40집, 2011. 12.
최장근, “일본의 竹島·獨島 역사연구 현황과 쟁점 – 1905년 ‘竹島영토’ 편입 ~2055년 ‘竹島의 날’ 제정–,”「東北亞歷史論叢」, 제18호, 2007. 12.
한국사연구회 & 한일관계사학회 편,『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독도사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1).
한일관계사학회 지음,『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2권(자작나무, 1998).
허동현, “역사 교과서(후소샤 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 한국사연구회 & 한일관계사학회 편,『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2008).
홍성룡,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2004년-2010년)”(2012. 8. 16 게재, 2013. 01. 25 검색) ,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http://news.donga.com
ethnos44, “re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2012. 11. 11), http://kin.naver.kim/qna
MK뉴스, “아베 총리, 헌법 개정 본격 시동”(2013. 5. 6), http://news.mk.co.kr
NewsMaker,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2013. 3. 5), http://www.newsmaker.or.kr
NWEAis, “일본, 미국서 ‘위안부=매춘부’ 조직적 왜곡 심각” (2013. 01. 24), http://www.newsis.com.
TV조선, “미 의회·정부 하시모토 맹비난”(2013. 5. 18), http://news.tv.chosun.com
“일본 교과서 왜곡 일지”(2005. 3. 31), http://cafe.daum.net/minjokkgnb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1951년-1989년)”(2012. 08. 16 게재, 2013. 01. 25 검색),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1994년-2003년)”(2012. 08. 16 게재, 2013. 01. 25 검색), http://blog.naver.com/skylove9026/10145404279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 일지”(2012. 09. 03 게재, 2013. 03. 21 검색), http://blog,daum.net/367park/22
낙서장, “일본 외무성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주장과 근거내용에 대한 반박”(2012. 10. 16). http://ds301.blog.m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이슈-근현대사-일본역사교과서,” http://www.nahf.or.kr/?sidx=73&stype=1
동아일보, “美, 아베 평화헌법 개정 시도 못본 척 하나”(2013. 5. 4), http://news.donga.com
문화일보, “미, 도 넘은 우경화·역사왜곡에 강력 경고”(2013. 5. 9), http://www.munhwa.com
시사포커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생떼쓰는 일본의 속내”(2013. 2. 27),

http://www.sisafocus.co.kr
연합뉴스, “일본 교과서 검정 파문 일지”(2013. 3. 26),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 혐한, 친한 단체 신경전”(2013. 3. 31),
http://www.yonhapnewa.co.kr
연합뉴스, “일본, 독도 · 센카쿠 문제 전문가회의 첫 회의”(2013. 4. 24),
http://www.yonhapnewa.co.kr
이모저모, “독도 영유권 분쟁 원인 및 일본 주장/ 한국 주장”(2012. 10. 22),
http://goodsoldier.co.kr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일본아시아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asjapan.org/web.php/lectures/2006/11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emb-japan.go.jp
한국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한국경제TV뉴스, http://www.wowtv.co.kr
한국사일반,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박”(2012. 10. 15),
http://blog.naver.com

Abstract

Current Issues between Korean & Japan : Dokdo and Historical Distortion in Japanese Textbooks

Kim Joo-Sik*

Since Korea and Japan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not been easygoing. There are two most explosive, and noticeable ones among topics which have affected the relationship ; Dokdo and Historical Distortion. Without these issu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ill take a turn for the better. However, unfortunately, it seems that it is almost never going to happen.

There is the Japanese conservative right-wing who has an influence on those two issues. The right-wing takes regard getting negative view or finding out dark past as an action from Self-torture view of history, and tries to dilute the Japanese sense of guilt on past invasions to neighbor countries. Moreover, to become a "normal country", they are trying to revise Constitution of the Japan so that Japan can possess the military and re-arm, dispatch troops abroad, and get the right to break the war. In other words, they expect Japan to become a powerful nation with great influence on Asia and world, as the period in which Japan conquered Korean peninsula, China, and South-Eastern nations. Japan still harbours secret romanticism for bygone days of imperialist glory. That is why neighbors want to never make the painful history happen again.

In order to deal with this effort, most of all, it is required to assert better argument with a careful, thorough analysis on Japanese opinio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about Dokdo. There might be a hidden card which can be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Japanese persistent effort to make Dokdo disputed area, and that is why we have to know that it i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secure a high-quality professional manpower because the issues of Dokdo and Historical Distortion are primarily the matter of logic and references. The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have open-minded to break down walls of their own majors. We have to introduce our achievements and stance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vigorously. As a definit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we have to develop national power. We have to possess naval forces and coast guard to protect our territory and Koreans overseas.

There are not many options Korea can do to Japan, except protesting denunciation, and pressing a joint efforts. Most of the suggestions stated before are what have to be conducted domestically. It is a miserable condition, because two problems are Japanese domestic issues, but they become international issues and we have to seek a solution for ourselves.